



정보와 정보가 만나 새로운 행정을 만듭니다

Public Information  
Sharing Center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100-17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B/D 7층  
Tel 02)2100-4423~5 Fax 02)2100-4426  
<http://pr.share.go.kr>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PISC

## ▶ Contents

05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06	비전 및 전략
	주요 서비스
07	• 정보조회 서비스
08	• 정보유통 서비스
09	•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10	• 사실여부 확인 서비스
	• 정보소재 안내 서비스
11	• 정보보호 서비스
12	• PIS 컨설팅 서비스
13	공동이용 절차
14	공동이용 정보
15	공동이용 성과
16	향후계획
17	공동이용 체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ISC)에서는

**People** 국민을 편리하게 합니다.

**Innovation** 정보 소통을 혁신합니다.

**Service** 고객지향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reation** 정보공동이용 문화를 창조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허브입니다.

※ 전자정부법 제37조 \_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둔다.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는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소재를 안내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도와 열람청구권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동이용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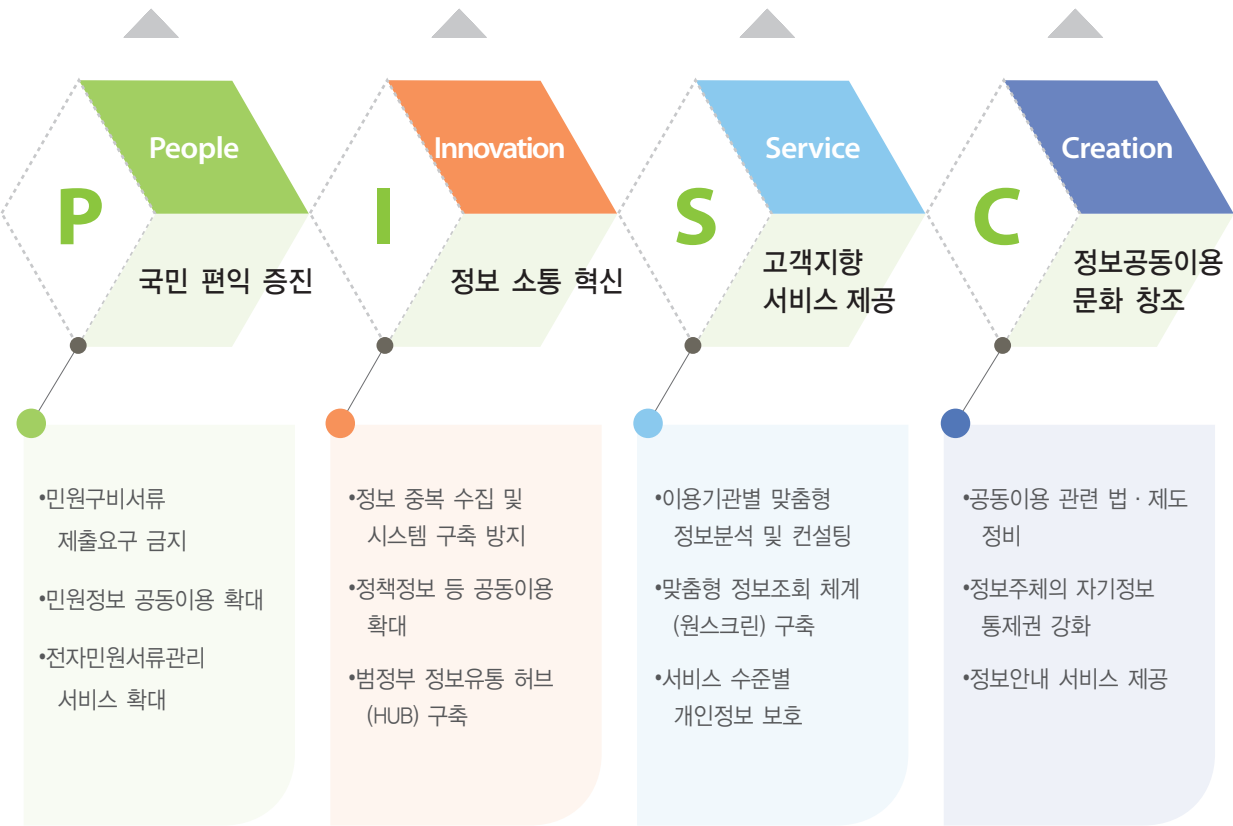
▶ 연혁

- 2005.11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 2008.8 1~3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대상정보 7종, 이용기관 수 행정기관·공공50·은행16)
- 2009.12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1차 구축  
(대상정보 82종, 이용기관 수 행정기관·공공57·은행16·교육1, 원스크린 및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정보유통 서비스 확대)
- 2010.5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지정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및 '열람청구권' 제도 시행
- 2010.11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2차 구축
- 2011.1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민원선진화추진단 통합
- 2011.11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3차 구축

▶ 비전 및 전략

민본·협업·녹색행정 구현

정보 공유로 새로운 행정 서비스 창조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 정보조회 서비스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하는 서비스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 사회복지대상자 확인



- 1. 주민등록등(초)본
- 2. 건축물대장(총괄)
- 3. 자동차세납세증명서
- 4. 지방세납세증명서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6. 자동차등록원부(갑)
- 7. 병적증명서
- 8. 토지(임야)대장

업무담당자가 정보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8종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출받아 처리

\* 여권발급신청, 기초노령연금신청 등 2,500 여개(정보조회서비스에 사용으로 되어 있는 민원사무 수) 민원사무의 120종 구비서류 정보는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확인

필요 정보항목만 조회하므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항목만 발체하여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합니다(One Screen 서비스).  
군필여부나 납세여부 등은 진위(Y/N)만 제공하여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진위확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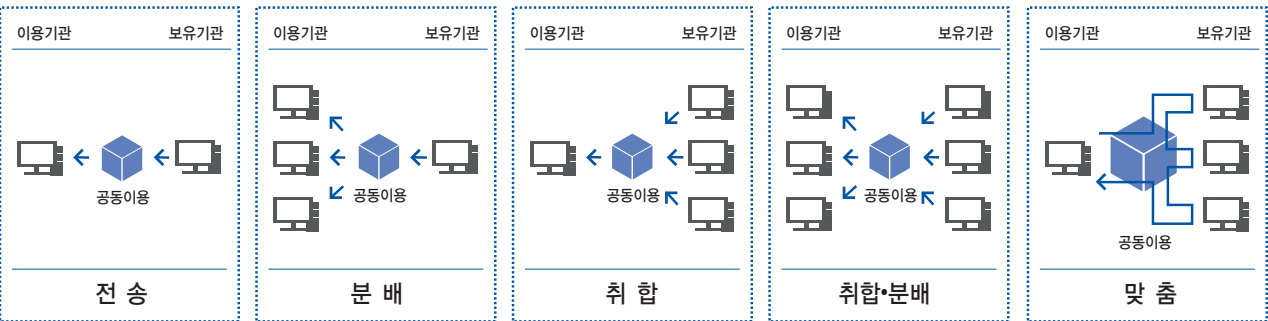
정보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회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확인하여 업무 처리

업무를 빠르고 투명하게 : 정보유통 서비스

기관 간에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주고 받는 서비스

〈정보유통 유형〉



- 전 송** 단일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단일 이용기관에 전달합니다.  
예)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
- 분 배** 단일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다수의 이용기관에 분배합니다.  
예) 외교통상부의 여권만료예고 정보를 각 시군구에 분배
- 취 합** 다수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단일 이용기관에 전달합니다.  
예)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의 25종 정보를 취합하여 행복e음에 연계
- 취합·분배** 다수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다수 이용기관에 분배합니다.  
예)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국적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분배
- 맞 춤** 다수의 행정정보를 목적에 맞게 추출·조합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예) 전국의 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산재하는 국가자격정보를 통합 제공

▶ 無방문 민원 완결 지원 :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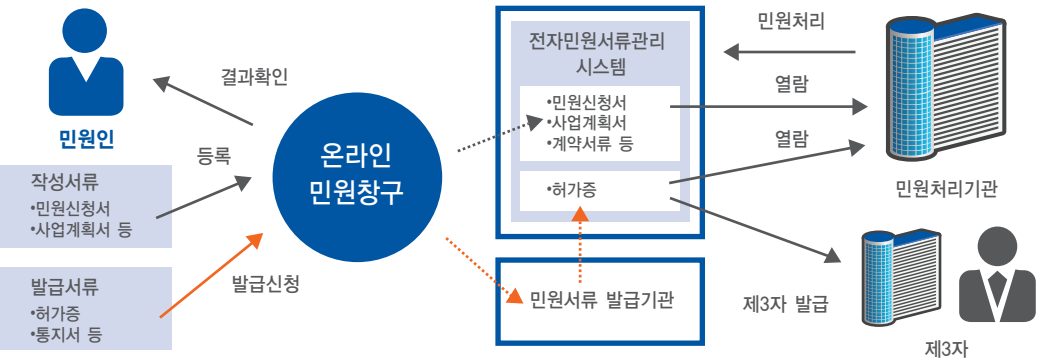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시 국민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민원서류 발급기관의 처리결과물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등록·열람하는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항 목	설 명
전자문서관리	등 록
	전자문서를 등록하여 보관하는 기능
	열 란
	보관된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기능
	제3자 발급
전자문서 유통증명	민원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자문서를 발급하는 기능
	이 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자문서를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하는 기능
	폐 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자문서를 관리정책에 따라 삭제하는 기능
전자문서 유통증명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의 등록, 열람, 이관, 폐기 증적에 대한 증명서 발급 기능
	증명서 검증
진본성 확인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전자문서가 원본인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

▶ 국민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도 공동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완결됩니다.

민원처리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신청부터 처리 및 결과 확인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민원처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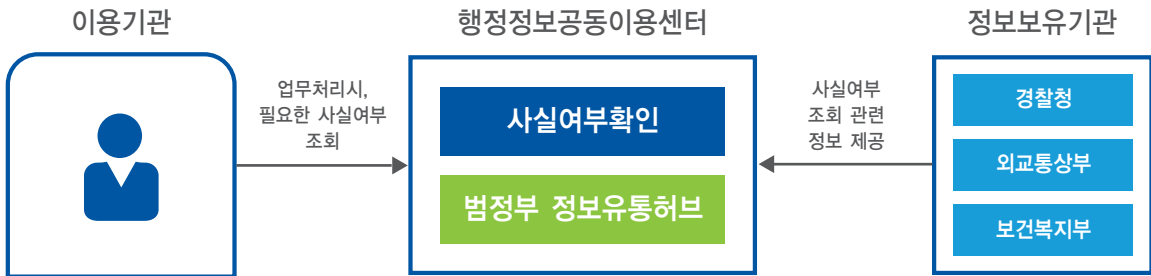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기관을 위한 연계통합패키지를 제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민원처리기관이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본확인, PDF변환, 전용뷰어 등의 기능을 연계통합패키지로 제공합니다.

▶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 사실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단순정보 입력과 사실여부 확인 정보만으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 21개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1개서비스(12개 기관) : 외국인 본인확인, 여권정보(외교부), 신원확인, 도로명주소정보(행안부), 국가기술자격정보(산업인력공단), 의료면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대상(보건복지부), 인지세, 휴폐업(국세청), 특허등록(특허청) 등

▶ 사실여부 확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단순 확인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 정보자원의 개방과 활용 지원 : 정보소재 안내 서비스

이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소재 안내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 증대

▶ 모든 공공정보의 일관된 안내를 위해 정보 관리를 표준화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수집·제공·관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업무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 파악이 쉬워집니다.

부처간 협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정보의 소재를 홈페이지(www.share.go.kr)를 통해 상시 안내합니다.

※ 공공정보 통합검색, 카테고리정보검색, 공공정보 검색API 등 서비스 제공

※ 근거 : 전자정부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공이용을 안전하게 : 정보보호 서비스

3단계, 3구간, 3중 보안체계 적용으로 철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가동

### ▶ 신청, 이용, 사후감독 각 단계별로 보안이 적용됩니다(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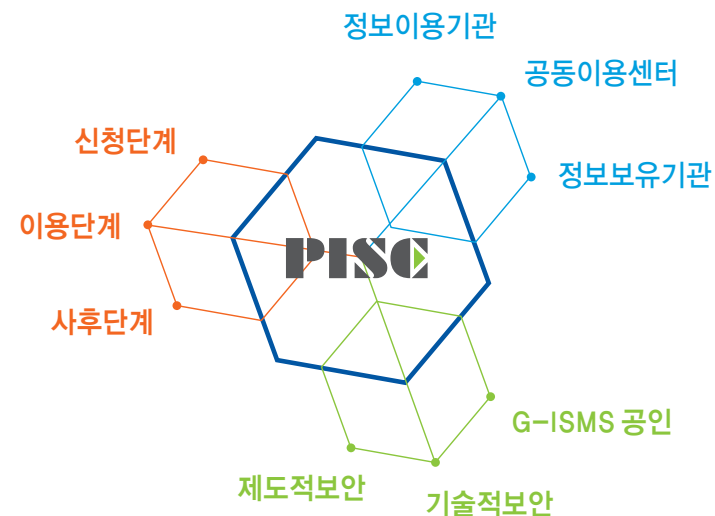
- 신청단계는 엄격한 승인절차, 보유기관 사전 협의 및 보안성 점검 등 수행
- 이용단계는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등 수행
- 사후감독단계는 실태조사, 교육, 보안점검 및 열람청구권 보장 등 수행

### ▶ 공동이용 전 구간에 걸쳐 보안시스템이 가동됩니다(3구간).

- 정보이용기관은 본인확인, 단말기보안, 해킹차단 등 적용
- 공동이용센터는 권한관리, 증적관리, 개인정보 모니터링 등 적용
- 정보보유기관은 DRM 처리, 필수정보 추출, PKI 암호화 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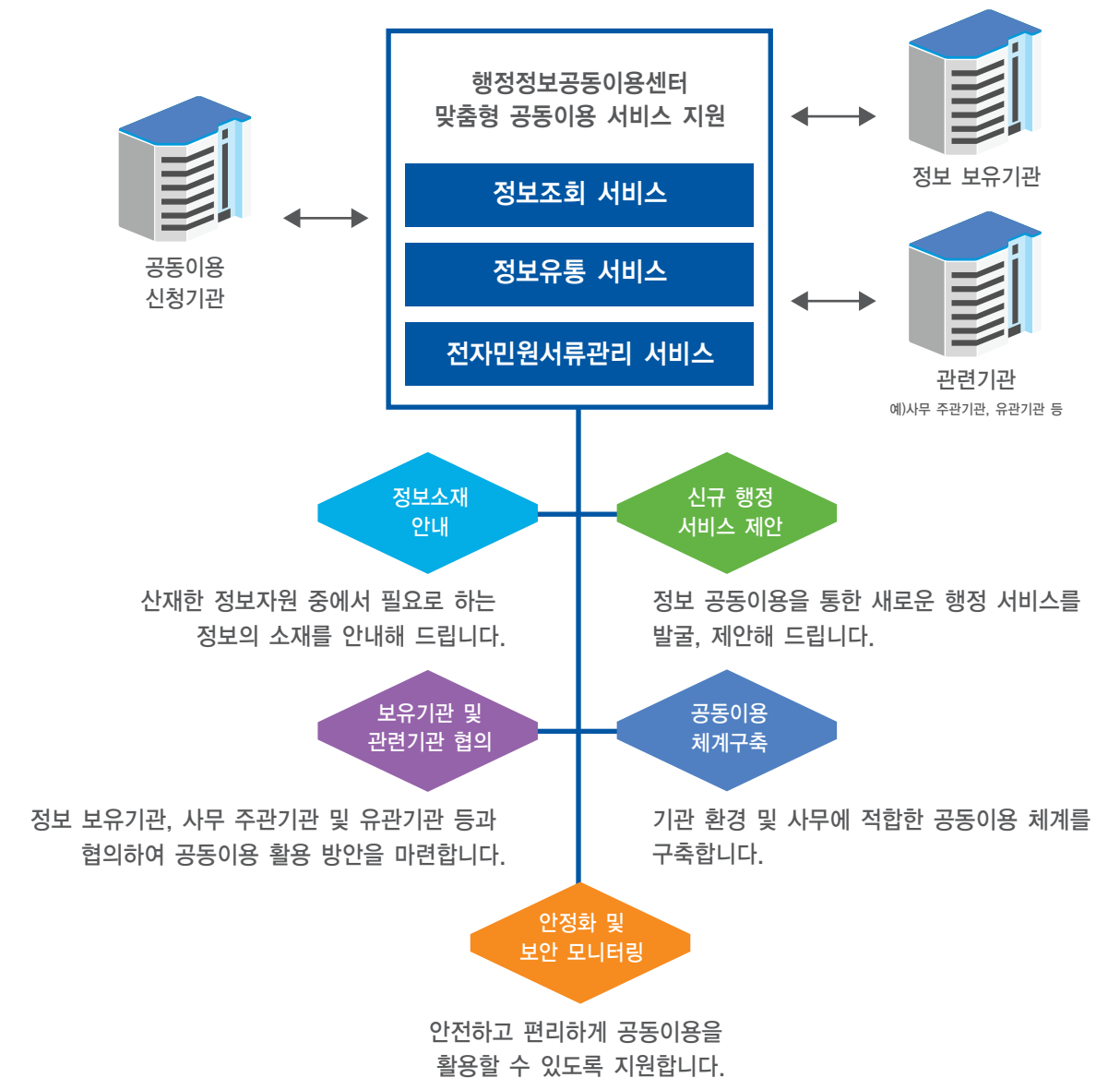
### ▶ 제도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보안인증을 통해 견고한 보안체계를 운영합니다(3중).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이용지침 등 제도적 보안
- 암호화,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등 기술적 보안
- 공동이용관련 시스템의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및 정기적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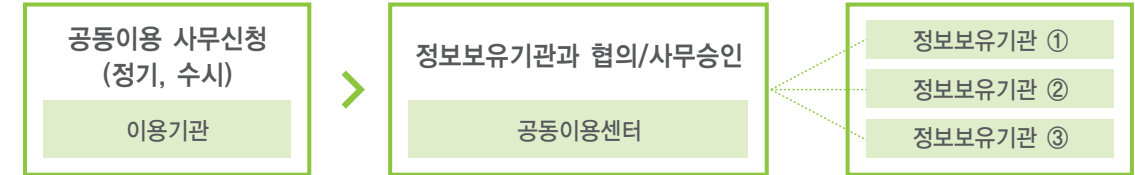
## 공공이용 활성화 지원 : PIS 컨설팅 서비스

기관 실정에 맞는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안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이용 환경 구축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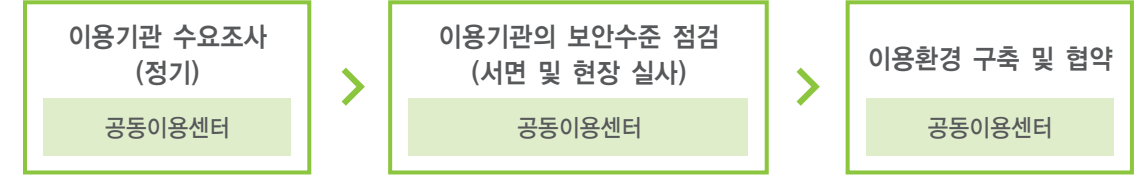


공동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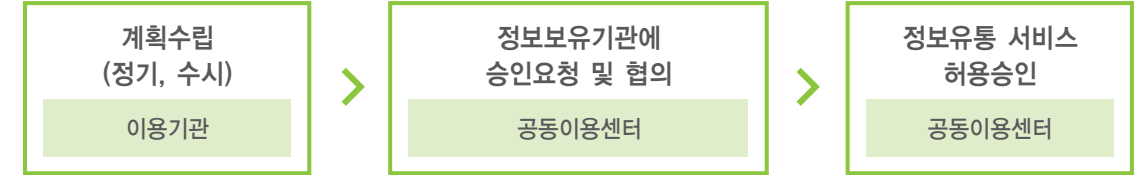
공동이용 사무 등록



신규 이용기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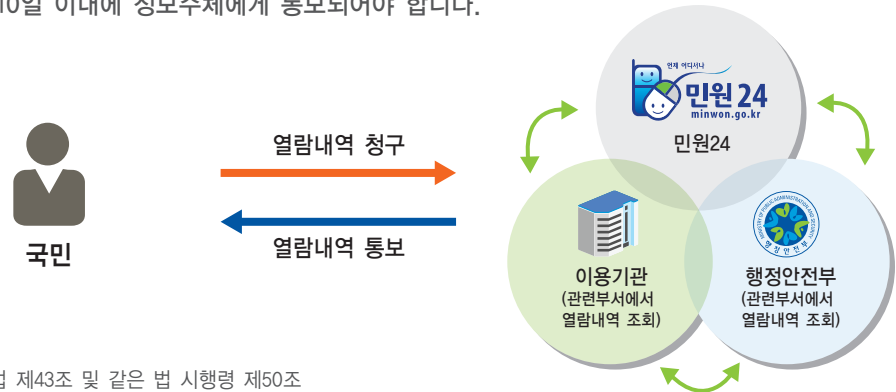
오프라인(CD, USB 등) 유통 정보의 온라인 유통 전환



※근거 :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공동이용 열람청구 제도

정보주체(국민)가 공동이용기관이 열람한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을 청구하는 제도로, 열람내역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공동이용 정보 (정보조회 대상 120종)

보유 기관	정보조회 대상 정보
외교통상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예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7)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농림수산식품부(5)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축산업등록증
지식경제부(9)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격력수첩, 전기공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시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보건복지부(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 의사,한 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 의사,한 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보육시설인가증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해양부(29)	개발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선박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1)	병적증명서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방재청(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해양경찰청(4)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대법원(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5)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공동이용 성과

▶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합니다.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결과도 빨라졌습니다.  
※ 여권발급신청, 기초노령연금신청,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등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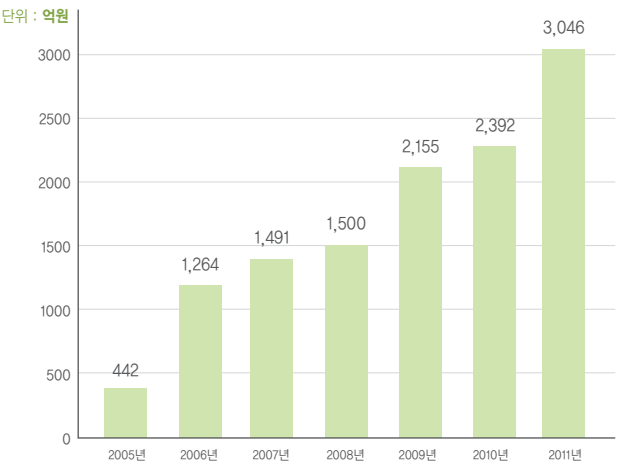
▶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창출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 연계로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09),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2010~2011), 미환급금 정보 통합제공 사업(2010~2011)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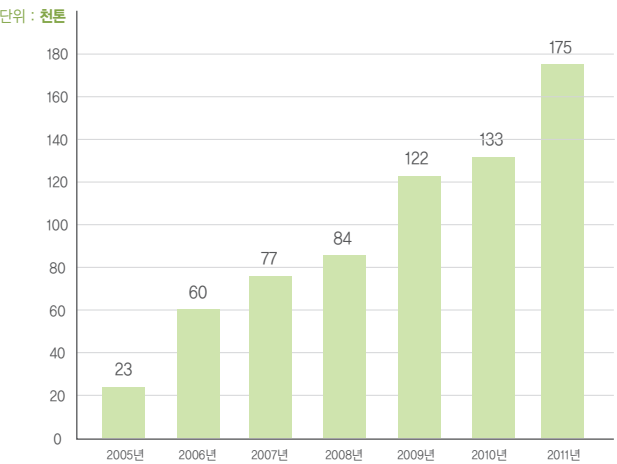
▶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줄입니다.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 교통비,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paperless 행정으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2011년10월 기준



❖ 탄소저감효과(t-CO2) 2011년10월 기준



❖ 이용량이 많은 정보

2011년 10월 기준				
순위	보유기관	정보조회 대상 정보	이용건수 · 구성비	
1	대법원	토지등기부등본	9,060,038	24.2%
2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 · 초본	9,003,938	24.1%
3	국토부	토지(임야)대장	7,470,584	20.0%
4	대법원	건물등기부등본	4,575,329	12.2%
5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811,134	4.8%

❖ 이용량이 많은 사무

2011년 10월 기준			
순위	사무유형	공동이용 사무	이용건수 · 구성비
1	내부사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539,109 15.0%
2	내부사무	부동산·법인 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	3,035,930 8.2%
3	내부사무	토지소유자 정리	2,636,413 7.1%
4	민원사무	직불제사업, 산지유통사업 등 농림사업 신청	2,194,769 5.9%
5	내부사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	1,904,413 5.2%

향후계획

- ▶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정보자원을 하나로 묶어 정보의 활용성 · 재생산성 ·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등 행정 패러다임 변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 관련 법 ·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정착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 2012년까지 공동이용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

· 정보 확대(2010 ▶ 2012)  
92종 ▶ 135종

· 기관 확대(2010 ▶ 2012)  
415개 ▶ 455개  
(행정 313, 공공 124, 민간 18)

· 적용사무 확대(2010 ▶ 2012)  
2,242종 ▶ 2,450여종



·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2010 ▶ 2012)  
전자민원 포털서비스 연계 13개

· One Screen 서비스(2010 ▶ 2012)  
405개 ▶ 450개 사무

· 정보유통 서비스(2010 ▶ 2012)  
60종 ▶ 200여종, 유통허브 구축

❖ PIS 서비스 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정보조회 서비스	제도평가과	02-2100-4421
정보유통 서비스	공유체계구축과	02-2100-4425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공유체계구축과	02-2100-4423~4424
정보소재 안내 서비스	공유체계구축과	02-2100-4423~4424
정보보호 서비스	공유체계구축과	02-2100-4423~4424
PIS 컨설팅 서비스	공유체계구축과	02-2100-4423~4424





**全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100개)**

- 공사/공단
- 협회
- 단체

**금융기관 (18개)**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교육기관 (7개)**

- 대학교

